

## 2010년 남북관계 평가 및 2011년 남북관계 전망

이 수 석\*

- I. 머리말
- II. 2010년 남북관계 평가
- III. 2011년 남북관계 전망
- IV. 맺음말

### 요 약

북한의 3대세습체제 구축과 이로 인한 대남강경정책으로 2010년 남북관계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긴장국면의 연속이었다. 현재 북한이 처한 내적, 외적 난관을 동시에 타개해 나가려는 극단적인 군사모험주의 노선으로 인해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남북관계 모든 분야의 교류가 축소, 중단되는 양상으로 변모했다. 즉,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 공고화와 내부결속을 위한 일련의 군사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이 올 한 해 남북관계의 특징이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이 조성되면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역시 뚜렷한 성과가 없는 한 해였다. 남북한 투자협력 사업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핵문제 미해결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대폭 축소되었다.

내년도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위험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이 되기 전에 북한은 정치군사분야, 경제분야, 대외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2011년도에도 연평도 도발과 같은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관계는 연속적인 긴장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북한의 압박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I. 머리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들을 간헐적으로 저지르다가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무자비한 도발을 자행하였다. 연초에 대남 보복성전 발언으로 한국을 위협하던 북한은 3.26 천안함 폭침과 11.23 연평도 도발로 그 호전성을 국제사회에 드러냈다.

특히 연평도 도발은 53년 정전체제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지 않는 것은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53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90년대부터 여러 가지 조치와 행동들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정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공격한 것은 연평도 도발이 처음이다. 현재 새로운 한반도 안보질서가 요구되는 것은 연평도 도발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도발이기 때문이다.

연평도 도발은 북한체제 내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북한에서는 3대세습 구축이 한창 진행중이다. 한때는 3대세습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연막전술을 전개하다가 44년만에 개최된 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으로 북한체제는 김정일 시대와

다른 권력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3대세습체제 구축과정이 2010년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0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3대세습 정권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한 유화국면과 강경국면의 반복이 이루어졌다. 유화국면이라고 해도 북한의 일시적인 평화공세에 따라 조성된 현상에 불과할 뿐,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발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

이 글은 2010년 남북관계를 시기별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런 후 2011년도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대내외 변수를 살펴보고, 그 대내외 변수에 따라 2011년 남북관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전망해보겠다.

## II. 2010년 남북관계 평가

### 1. 이중공세 국면(1월~천안함도발)

한국정부는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언급했고,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 북한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도 다른 때와 달랐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는 구상과 작전을 펼칠 것을 언급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비난도 자제했다.<sup>1)</sup> 북한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대북지원을 얻고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즉, 경제분야에서의 실리추구로 인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의 여지가 보였고, 2010년 한해 남북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경제분야에서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유화국면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경제실리 때문에 정치군사 분야에서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강은 양면전략과 같은 이중적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는 정체와 긴장상태를 겪게 된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대남위협과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 1월 5일 북한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류경수 105탱크사단 방문시 남침 가상 공격훈련을 참관했으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의 육해공군 합동훈련 참관은 집권이후 최초이다. 1월

말에는 NLL 북측 수역 해안포 발사 및 수차례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했다. 어쩌면 북한은 작년 11월 대청해전이후 대남군사도발을 구상했고 그 도발을 올 초반부터 준비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올해 초 한국의 언론에서 보도된 북한급변사태 대비 계획, 키리졸브 훈련 등에 대해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1월 15일 보복성전 발언 이후 1월 24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발언, 3월 7일에는 판문점 대표부의 정전협정 및 불가침 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통해 대남 비난과 군사적 강경태도를 표명했다. 특히 3월부터는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재개한다.<sup>2)</sup>

북한의 이런 대남강경정책 발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현 상태로 유지되었고, 북한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특성이기도 하다. 북한은 외화벌이의 수단이 되는 교류는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고자 했던 것이다.

2010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해외공단 남

1) 통일연구원, 『2010년 북한신년공동사설 분석』 (통일연구원 2010.1), p.12

2) 북한은 대통령의 실명거론 비난이 있는 후 천안함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의 대남관련 태도를 보면,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할 때는 북한이 모종의 도발이나 대남 강경조치들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방안과 공동 해결과제 도출에 대해 토의했다. 2월 1일 개최된 4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에서는 3통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모색했고, 2월 8일에는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은 본인의 잘못으로 빚어진 불상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별 다른 성과없이 회담이 종료되었다.<sup>3)</sup> 3월 2일에는 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3통 문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sup>4)</sup> 회담결렬 후, 북한은 3월 25일에서 31일까지 금강산의 남측 부동산을 조사하면서 몰수를 위한 강경조치를 전개했다.<sup>5)</sup>

## 2. 경색국면(천안함도발~9월초)

북한의 천안함 도발로 한국이 대북정책을 전면 검토하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일대 전환을 맞이한다. 그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은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기조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관계없이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항상 강경입장을 표명했는데, 천안함 도발은 북한이 한국의 입장이나 국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나타낸 사건이다.<sup>6)</sup>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화해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대국가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한반도는 정전협정 이후 평화상태가 아닌 휴전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으며,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세력이며, 김정일 정권의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또한 21세기가 탈냉전시대라고 하지만, 천안함 피격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의 움직임은 보면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시대의 유산인 북방군

3) 통일부, 『통일백서』 (2010), p.58

4) 『통일백서』 (2010), p.64

5) 천안함 도발 이후 북한은 4월 3일 금강산내 이산가족 면회소, 소방서,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 등 우리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관리인원의 철수를 요구했고 이어 4월 23일 동결된 한국당국의 자산을 몰수하고 민간자산에 대한 동결을 주장했다. 그리고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내 남측자산을 동결하고 4월 30일 금강산관리인원에 대해 16명을 제외하고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

6) 북한의 천안함 도발배경에 관해서는 박형중,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통일연구원 온라인 정세분석』, 2010.6.4 참고

사동맹과 남방군사동맹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도발이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외교안보부처 합동의 5.24조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통일부는 5대 남북교류사업을 중단하였다. 즉,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의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를 선언했다. 국방부는 2004년 이후 중단된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하며,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등 PSI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여론을 조성하고 유엔안보리 회부 등 안보리차원의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5.24조치 이전인 5월 20일 국방위 대변인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에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고, 5월 24일에는 전선중부지구 사령관 공개경고장에서 대북심리전 재개시 직접 조준사격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은 5월 25일 5.24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

절하겠다고 조평통을 통해 선언했다.

5월 27일에는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7개 항의 조치를 발표했다. 남북협력교류와 군사적 보장조치 전면철회, 남한군부가 재개하는 반북심리전 책동에 무자비한 대응,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쌍방향의 완전 무효화,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 침범시 즉시 물리적 타격,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남한의 함선, 비행기,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 전면 불허, 남당국가 북한출입 엄금, 검열단 차단행동에 대한 규명 요구 등이다. 6월 12일에는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sup>7)</sup>

북한의 천안함 도발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 9일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북한은 안보리를 비난하면서도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나름대로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적대세력들의 모략외교의 실패”<sup>8)</sup>라고 했지만 그다지 수위를 높이지는 않았다. 안보리 의장성명 직후 북한은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및 유엔군 장성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진정성있는 행동이라기 보다 다분히 평화공

7) 『통일백서』 (2010), p. 45

8) 『로동신문』, 2010.7.14

세 차원이다. 북한으로서는 천안함 공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대남강경정책을 전개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가시화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자 북한은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대미평화공세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던 북한의 전략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북한은 언론보도를 통해 연이어 대남강경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7월 24일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핵전쟁 연습 소동으로 비난하면서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맞서며,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북한식의 보복성전 개시를 언급하였다. 보복성전 언급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월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선군으로 다져진 더 크고 더 무서운 억제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8월 1일자 『로동신문』은 “상용무기(재래식무기)에 의한 전면전쟁이든, 전자전이든, 핵전쟁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 군대의 작전반

경은 한계가 없고 타격지점에는 제한이 없다”고 까지 할 정도로 한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sup>9)</sup>

북한군은 8월 3일 전선서부지구사령부의 통고문을 통해 우리 군의 서해 5도 인근 해상사격 훈련계획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을 단호하게 결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선서해에는 북한이 설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서해 5도 인근 수역에 어선을 포함한 모든 민간선박들이 해상사격구역안에 들어가지 말 것을 사전에 통고한다고 했다. 우리 측 선박에 대한 협박성 발언인 것이다.<sup>10)</sup> 『로동신문』 8월 10일자에서는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수위를 고조시켰다.<sup>11)</sup>

이런 위협적 발언과 동시에 북한은 도발행위도 실제로 자행하였다. 8월 8일 북한은 우리 선박 대승호를 나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후에 이들 선박과 선원들을 귀환시키는 조치를 했지만, 다분히 의도적 도발이라 보여진다. 8월 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해안포 발사와 같은 직접적 위협 행위를 자행했다. 북한의 NLL을 향한 포사격은 한국함정의 NLL 인근 해상훈련 및 항해를 직접적으로 위

9) 『로동신문』, 2010.8.1

10) 『조선중앙통신』, 2010.8.3

11) 『로동신문』, 2010.8.10

협하기 위한 의도이다. 또한 7월 30일부터 실제 폭약이 담긴 북한의 목함지뢰가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북한의 의도적 유출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군당국은 목함지뢰 유출량은 200내지 300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90년대 이후 이처럼 대량으로 발견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아마 북한이 고의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sup>12)</sup>

한편 5.24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당분간 금지하고 개성공단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사업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생산활동을 유지하지만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은 50~60%수준으로 축소조정하기로 했다.<sup>13)</sup>

이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이 항상 개성공단의 축소 및 중단을 위협하더니 실제로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니 반발한 것이다. 5월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구두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조치는 공단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

될 경우 남측의 책임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언급하였다.<sup>14)</sup> 자신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외화수입원인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을 북한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이 막대한 외화벌이의 자금줄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3. 일시적 유화국면 (9월초~연평도 도발)

천안함 도발이후 경색국면을 지속하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평화공세로 인해 하반기에 유화국면을 맞이한다. 북한은 강경발언과 함께 도발을 자행했지만, 한편으로 당대표자회를 전후해서 체제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대외 유화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9월 들어 북한이 대남유화공세로 나오면서 경제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9월 4일 북한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쌀과 중장비, 시

12) 이수석, “안보리의장 성명이후 대응책 : 북한의 입장” 『월간 북한』 465호 (북한연구소, 2010년 9월호), pp.56-57

13) 비록 5.24조치로 남북간교역이 중단되었지만 상반기인 1월에서 6월간 남북교역규모는 9억 9,413만 달러였고, 개성공단의 교역액이 6억 9,109만달러로 전체교역에서의 비중이 약 69.5%를 차지하였다. 상반기에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수는 822개였으며 교역품목의 수는 732개에 이르렀다. 『통일백서』 (2010), pp.54-55

14) 『통일백서』 (2010), p.65

멘트지원을 요청했다.<sup>15)</sup> 이어 9월 7일에는 그동안 억류되었던 대승호 선원을 석방했고, 9월 10일 조선적십자회를 통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대승호 송환시 북한 방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라고 선전했으며,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9월 30일 남북 군사실무접촉에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검열단 수용 요구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10월 26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된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논의되었는데, 이산가족 상봉재개는 올해 남북교류중에서 특별한 행사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적십자 실무회담을 통해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2회에 걸쳐 6박 7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대가로 식량 50만톤과 비료 30만톤 지원을 요구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대북식량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으로 북한의 평화공세는 대북지원을 받기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평화공세 사례 중의 하나가 민

항 직통전화 재개이다. 북측은 지난 10월 1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평양 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 비행구역관제소 사이의 남북 민항 직통전화를 10월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인천항공 교통센터와 북측 평양 비행구역지휘소(항공교통센터) 간의 시험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5.24 조치 이후 단절했던 남북간 항공 관제통신망을 갑자기 재개한 것은 수해복구용 쌀, 시멘트 지원요청, 이산가족상봉 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 표명 등 일련의 대남 유화공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금강산 관광재개를 협의하자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은 금강산 관광재개 노력에 주력하는 인상을 보였다. 그만큼 금강산 관광은 북한으로서는 주요한 달러수입원인 것이다. 북한은 10월 14일에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일부에 보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가질 것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10월 14일 ‘화해와 협력은 겨레의 지향, 시대의 요구’라는 제목의 별도 논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협력은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고 겨레의 한결같은 지

15) 전현준, “2010년 대남정책”, 『월간 북한』 468호 (북한연구소, 2010년 12월호), pp.69-70



향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다”고 주장했다.<sup>16)</sup> 북한이 갑자기 화해협력의 전도사로 돌변한 것이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한발 더 나간다. 10월 16일자에서 “조선이 항상 놓칠 수 없는 과제로 간주해 온 것이 북남관계 발전”이라면서, 또한 “조선인민에게는 경제부흥과 더불어 북남관계 문제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달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9월 이후의 화해공세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북남관계를 그 어떤 국제파동에도 끄떡없는 동족간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것이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남관계개선의 돌파구도 2012년을 향한 노정도 위에 뚜렷이 내다보고 있는 듯 하다”<sup>17)</sup>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은 강성대국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함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0월 18일자 로동신문은 “금강산 관광

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면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조속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10월 15일 갖자는 북측 제안에 대해 남측이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북남관계 개선을 외면하는 매우 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나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8)</sup>

그러나 10월 27일자 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해 “남이 금강산면회소 정상화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거부하였다”고 비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관련 실무회담에 한국측이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으며 핵전쟁의 위험도 가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쌀지원 문제가 북한의 의도대로 제대로 되지 않자, 북한은 모종의 강경도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16) 『로동신문』, 2010.10.14

17) 『조선신보』, 2010.10.16

18) 『로동신문』, 2010.10.18

#### 4. 긴장국면(연평도 도발이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남북 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 긴장대결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북한은 외무성, 조평통 등의 담화를 통해 강경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정당한 자위조치라든가,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 발언 등이 예이다. 북한은 11월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11월 25일 판문점 대표부 통지문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근본원인을 NLL로 돌리면서 미국의 책임 및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26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전쟁전야로 언급하면서 남북대화 무용론을 제기한다.

북한의 연평도도발이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어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을 자극,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 특히 북한은 자신이 연평도 도발을 저질러 놓고 관영매체를 통해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비난한다. 11월 29일자 로동신문은 ‘붙는 불에 키질하는 위험한 도발 소동’이라는 논평에서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소동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전야의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내외 호전광들이

다시 도발해 오면 주저없이 침략자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들어내 전쟁의 근원을 깨끗이 청산할 것”<sup>19)</sup>이라고 위협했다.

남북관계는 12월 현재까지 긴장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의 조평통을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면밀히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엄중한 반공화국 군사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억지선전과 대남협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 5. 종합평가

북한의 3대세습체제 구축과 이로 인한 대남강경정책으로 2010년 남북관계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긴장국면의 연속이었다. 이는 53년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북한이 의도적으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파괴하려 한데서 기인한다. 물론 90년대부터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조치와 행동을 취해왔지만 2010년 11월 연평도도발 만큼 직접적으로 정전체제를 파괴시키는 행동은 처음이다.

19) 『로동신문』, 2010.11.29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이 조성되면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역시 뚜렷한 성과가 없는 한 해였다. 사회문화 교류에서 안중근 기념사업회가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여순에서 남북공동기념행사를 개최했을 뿐이다. 또한 올 해는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지만,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로 남북한의 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했다. 남북한 투자협력사업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핵문제 미해결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역시 대폭 축소되었다.

2010년 남북관계는 현재 북한이 처한 내적, 외적 난관을 동시에 타개해 나가려는 극단적인 군사모험주의 노선으로 인해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다른 모든 분야의 교류가 축소, 중단되는 양상으로 변모했다. 한때는 북한이 경제분야에서의 실리추구를 통해 일시 유화적 국면이 조성되는 듯 했으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압박정책으로 인해 상반기 정체국면, 하반기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2010년 남북관계는 김정은으로의 3대 후계체제 공고화와 내부 결속을 위한 북한의 일련의 군사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을 특징으로 한다.

### Ⅲ. 2011년 남북관계 전망

#### 1. 변수

##### (1) 3대세습 체제의 안정화 여부

3대세습은 북한내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정책, 한반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후계구축을 빨리 서두르고 있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은 과거 60년대 김정일의 후계구축과정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파격적으로 빠르다. 김정일은 10여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후계자에 내정되었고, 또 다른 10여년이 지난 이후에야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반면에 김정은은 2, 3년안에 김정일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물려받으려 한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급속히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북한체제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이다. 김정일의 건강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체제내부를 단속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3대세습에 대한 반대 혹은 냉소적 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북한지도부는 감쪽놀랄 새로운 정책이나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

작년 11월의 화폐개혁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도발은 군부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김정은의 군에 대한 지배를 공공히 함으로써 선군정치를 이끌어 나갈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3대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능력과 의지를 북한주민들과 군간부, 주변국가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도발한 것이다.

대외적으로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 시켜 서해 5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를 희석시키면서 북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논의로 이슈를 전환시키고자 한다. 결국 북한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무력도발을 통한 위기 돌파전략인 것이다.

또한 3대세습 정권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북한 정권은 주체와 자립을 강조하나 북한스스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체제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후계자에 대한 우상화와 정통성을 강조해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들다. 당장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대세습 정권은 김정일 체제보다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3대세습의 특성은 내년도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남북한의 정책

북한의 최근 대내외적 행보는 북한 지도부의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성이 혼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의 대변인 성명이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강경한 성명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면, 충분히 한국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북한은 판단했으나,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위협성 발언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대남정책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향후에도 자신들의 입장과 국제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발적 행태를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정체 및 긴장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 NLL 대신 1999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 주장,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등을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미증유의 사태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에 관해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도발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사라졌다. 내년도에도 북한의 사과와 전향적 조치가 없는 한, 한국의 대북정책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이런 기조는 남북관계에 주요 변

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에 한국이 북한의 평화공세에 호응해 남북교류협력에 동의한다면 남북관계는 활성화될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PSI 참여 중단, 한미합동해상훈련 중지 등 군사적 문제에서 북한의 입장을 따르고,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살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기존의 정책을 전환한다면, 북한은 대화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따라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나오더라도 단기적 현상에 불과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다른 문제를 거론해서 남북대화를 경색시킬 것이다.

### (3) 북미관계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북한은 상당한 기대를 했었다. 한국내부에서도 오바마의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과 코드가 안 맞아 현 정부가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 즉, 미국은 적극적 대북정책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한국만 홀로 적응하지 못하는 외교적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

측한 것이다. 그러나 해빙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과의 관계가 북한의 기대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북한은 통미봉남을 통해 한국과 미국간의 의사결정이 엇박자가 나고, 이로 인해 남한내부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남남갈등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이후 한미간에는 확고한 공조체제가 유지되는 반면, 북미관계는 담보상태로서 대화의 기미가 별로 없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전격적인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대북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8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의사를 밝힌 것은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화해구도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북미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남북대화도 이에 따라간다. 북한은 북미관계를 잘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유화국면을 조성,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으려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를 정체시키고, 긴장국면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 2. 전 망

### (1) 2011년의 의미

일반적으로 2012년의 북한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2012년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 김정일 출생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북한 스스로 2012년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2012년에 이르러 김정일의 건강문제와 북한지도부 내 권력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북한의 권력구도, 북한군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2012년이 되기 전에 북한체제와 남북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강성대국의 북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과정이 중요하다. 2011년은 북한이 공언한 2012년 ‘강성대국의 문턱’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해이다. 2012년으로 가기 위해 올해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내정했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자행했다. 2010년이 김정은 후계자의 등장과 이에 따른 대남도발이 큰 특징이라면, 2011년 역시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를 모색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해가 될 것이다. 2012년 사상, 군사, 경제의 강성대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2011년에 그 기반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후계자 김정은은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경제를 되살리고 인민생활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이룩해야 하고 오랜 친선관계에 기반한 북중관계를 지금보다 더 견고한 경제협력, 군사협력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의 유산인 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모색해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11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2011년이 주목되는 한 해가 된다. 2012년이 되기 전에 북한은 정치군사 분야, 경제 분야, 대외 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2011년이 지금보다 더 위험한 한해가 될 것이다. 2012년은 축제분 위기로 강성대국의 분위기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2012년은 오히려 안정적 남북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연평도 도발과 같은 만행을 내년에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쩌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북한체제 몰락의 징후가 될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한 체제가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체제의 정당성이 미약할 때 대외 강경정책으로 나서기 쉽다. 그러나 체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 강경정책은 이로 인해 오히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전쟁에 대

한 공포, 지도부내의 갈등 등으로 체제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은 3대 세습체제로 가는 북한 내부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증이다.

현재 북한은 단기간에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는 김정일의 조급성으로 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 3대세습 구축과정에서 군부나 당인사들이 김정은에게 과잉충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누구도 쉽게 김정일부자 앞에서 온건책을 제시하기는 곤란한 상황일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판단력 약화의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한 권력층의 무한충성 경쟁이 오히려 체제 내부 통제력 이완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011년은 북한체제내부의 변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 긴장상태의 지속

북한의 강온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 및 연평도 도발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체 및 긴장상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체제위기를 대외 위기조성으로 돌파하려는 구태의연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했지만, 1998년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함

께 강성대국을 내세우면서 기사화생했다. 200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 외중에도 북한은 핵개발로 2차 핵위기를 조성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였다. 지금도 북한은 연평도 도발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한다.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존재를 부인했던 우라늄 농축핵개발의 자발적인 공개와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북한의 고립은 깊어가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국지전 도발가능성은 상존하며, 서해 5개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가능성도 있다. 특히 육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3차 핵실험을 통해 후계자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려 할 수도 있다.

## (3) 제한된 경험 재개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건강, 후계구도,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경제난 등으로 체제 내구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북한체제는 외부의 지원없이는 견딜 수 없는 구조인데, 외부로부터의 지원 중 한국이 많은 지원을 하는 국가이다.

2000년대 남북경협 통계를 보면, 북한은 남북경협에 상당히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경협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8년에는 남북경협이 18억불로 북한은 5억불의 흑자를 누렸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하였기 때문에 남북교역의 중단은 북한 경화수입 감소를 의미한다.<sup>20)</sup>

한국으로부터의 대북지원 및 지원성 경협은 북한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의 대북지원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 제스처를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엄격한 검토하에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인해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는 감소될 것이다.

#### (4) 6자회담 재개로 일시 유화국면 조성

북한은 국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하였다. 올해에만 하더라도 천안함 도발이후에 6자회담 재

개를 언급했고, 연평도 도발이후에 다시 언급하고 있다. 물론 무조건 6자회담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고 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포기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한·미·일 3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5개 항의 전제 조건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제조건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 역내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 5가지이다. 북한 역시 중국의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지난 12월 9일 방북했을 때 IAEA 사찰단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sup>21)</sup>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제안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또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고 일축했고, “제재의 모자를 쓴 채로 대화에 응할 수는 없다”며 유엔의 제재가 해제돼야 6자회담에 복귀하

20) 최진욱, “2011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시대』 12월호 (민주평통, 2010), p.19

21) 『연합뉴스』 2010.12.17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up>22)</sup> 북한의 6자회담 참여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 정세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참가할 수 있는 성격의 회담이 6자회담이라고 북한은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관계에 현재와 같은 긴장국면 보다는 유화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북경에서 6개국의 대표가 모여 회담을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조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6자회담 개최는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유화국면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체제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2010년 남북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강온 양면전략과 같은 이중적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는 진전과 정체의 반복적 상태를 겪었다. 현재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이은 하반기 연평도 도발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 긴장대결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북한으로서는 청년대장 김정은의 능력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강경정책을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북한은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하에 한미군사훈련과 같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한국측도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군사훈련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점이 내년 남북관계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북한의 압박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지만 유연하고 탄력있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제의나 군사실무회담 제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제기 등은 북한의 대표적 평화공세의

22)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다이빙귀 중국 국무위원이 지난 9일 방북했을 때 한.미.일의 요구를 북측에 전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0.12.17에서 재인용

예인데, 내년에도 이런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사적 문제 해결없는 경험이나 사회문화교류는 언제든지 깨지기가 쉽다. 우리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형중,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통일연구원 온라인 정세분석』, 2010.6.4 참고  
이수석, 『월간 북한』 465호 (북한연구소, 2010년 9월호)  
전현준, “2010년 대남정책”, 『월간 북한』 468호 (북한연구소, 2010년 12월호)  
최진욱, “2011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시대』 12월호 (민주평통, 2010)  
통일부, 『통일백서』 (2010)  
통일연구원, 『2010년 북한신년공동사설 분석』 (통일연구원 2010.1),  
『로동신문』, 2010.7.14, 8.1, 8.10, 10.14, 10.18, 11.29  
『연합뉴스』, 2010.12.17  
『조선신보』, 2010.10.16  
『조선중앙통신』, 2010.8.3, 12.9